

# 11대 도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의장에 '재선' 송성환 의원  
부의장 환원수·송지용 의원  
"도민 삶 향상 노력 다할 것"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의장에 재선의 송성환 의원(전주7)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2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의장단 선거에서 총 38표 중 36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송성환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민선7기 도정 및 교육행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양측이 틀너비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도의회가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되 협조할 일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모범도시, 전라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가 2일 열린 가운데 제11대 도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의장에 재선에 성공한 송성환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부의장으로 환원수 의원과 송지용 의원이 선출됐다.

북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

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부의장 선거에서 38표 중 35표를 획득한 환원수 의

원(임실)과 38표 중 37표를 얻은 송지용 의원(완주1)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진성 기자

##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제청

김선수, '순수 재야' 민변 회장 출신... 수차례 후보로

이동원·노정희, 법원행정처 경험 없이 오직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임명제청하면서 순수 재야 변호사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첫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이 될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대법관 후보자 추천명단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명단에 수차례 이름을 올렸던 김 변호사가 대법원장의 제청 명단에 오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간 법조계에서 김 변호사는 강력한 대법관 후보로 손꼽혔지만 제청 문턱에는 반번히 오르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30여년간 재야에서 활동해오면서 노동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앞서는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민변 창립 멤버로서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다. 앞서 민변 출신으로 1994년에 이돈희 전 대법관이 임명된 바 있으나 이후 민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난해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진보적 성향의 김 변호사가 대법원에 임명될 경우 노동 분야 대법원 판결에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노동법에 정통한 김지형 전 대법관의 퇴임 후 사실상 노동 분야에서 전문적인 대법관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고개를 넘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민변 출신에 진보 성향이라는 점에서 보수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원장



노정희 관장

중 여성은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 3명이며, 오는 11월에 김 대법관이 퇴임한다.

또 출신 학교 분포도 다양화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이 원장은 고려대 법대, 노 관장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원장과 노 관장은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고 재판 업무만을 해왔다. 이 원장은 2001년과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차례 했고, 노 관장은 2007년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을 뿐 법원행정처 경험은 전무하다.

노 관장은 법원 내 여성, 아동 등 소수자 문제를 연구하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민 대법관이 젠더법연구회 전임 회장이었다. 또 법원 내 개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 문 대통령, 8일부터 인도·싱가포르 방문

5박6일간... 신남방정책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길에 오른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7월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 간 국빈방문 한다.

김 대변인은 "인도는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 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이라고 인도 방문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국과 인도는 올해로 수교 45주년을 맞는다"면서 "인도는 경제 분야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서 오세요"... 수보회의 첫 참석하는 신임 수석들  
회수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

중요 협력파트너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3박4일의 인도 국빈방문 기간 동안 랏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과 면담과 모디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국과 인도 두 나라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할리마 아롬 싱가포르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간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우리의 최대 건설 시장이자, 아세안에서 교역액 2위 국가로 문 대통령의 '신 남방정책' 추진의 핵심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기간 동안 리선룡(李仙龍) 싱가포르 총리

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싱가포르의 오픈인 리더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설명하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두 나라의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신 남방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우리나라 외교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기무사 세월호 조직적 관여 문건 발견

### 유족 사찰·단원고서 활동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됐다. 기무사가 사고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진도 팽목항 구조 현장뿐만 아니라 단원고에서도 기무사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TF는 이번 문건이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운용 계획, 시위정보 제공 등 안보 단체를 통한 여론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조사TF가 이번에 발견한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고발생 13일째였던 지난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다. 더불어 문건에는 특별법이 보상, 혜택 범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대책위가)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혀 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문건은 실종자 가족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 및 방안이 서술돼 있었다. 실종자 가족 설득 논리로는 탐색구조와 유가족 지원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출 투입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문건은 2014년 7월10일 기준 수색구조 비용이 99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며 이를 일일로 환산하면 11억5000만원이 든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문건은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할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구조 현장인 팽목항 뿐 아니

## '유가족 사찰'...기무사령부 직무 범위 벗어나 기무사, 보수단체 맞불집회 열도록 정보 제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같은 해 5월13일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 운영해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했다.

기무사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참모장(육군 소장)을 TF장으로 사령부와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관리 등으로 업무를 나눴다.

특히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에게 직접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직위로써,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다. TF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제한된다"며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합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TF활동 후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탐색구조와 선체인양 등 군(軍)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 문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조사TF는 전했다

라 안전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돼 일일 보고를 한 정황과, 국회 동정을 보고한 정황도 함께 발견됐다.

특히 이같은 민간인 사찰은 국군 기무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은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는 걸로 상식적으로 보여진다"며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어떤 식으로 동향을 파악하게 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무사가 보수단체들이 좌파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소위 '좌파집회'(시민단체 집회 등) 정보를 달리는 요청에 응해 세월호 사건 관련 시국 집회 정보를 제공한 문서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조사TF는 이번엔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확인 예정"이라며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활동 예정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김병관 의원 "전준위 청년 최고위 폐지 유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2일 전국대의원회의 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부문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부분별 최고위원을 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청년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선출됐던 2015년 전대 이후 청년을 대변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놴"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400명의 청년들이 광역 기초의회에 진출했다"면서 "당의 커다란 자산인 청년은 앞으로 당을 더 키우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김 최고위원은 "청년리더가 당 지도부 활동하는 것은 청년이 당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필요 충분조건이다. 전준위에서 여성 최고위원은 반드시 한 명 포함하기로 했으면서 당을 위한 청년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까지 청년 당원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부분별 최고위원을 폐지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당에서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전준위 결정을 재고해주시기를 청년 대표로서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달 29일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말던 권역별 최고위원과 여성·노인·청년 등 세대·계층·부분별 최고위원 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국단위로 선출되는 5명의 최고위원 내에 여성 최고위원 1명을 무조건 포함하도록 했다. /뉴시스